

6·15 남북정상회담 5년, 평가와 과제

다자간 국제협력 : KEDO와 TRADP사업을 중심으로

배 종 열*

- I. 서론
- II. 다자간 국제협력 실태와 중요 구상
- III. 다자간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와 과제
- IV. 맺음말

요 약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 체제의 탄생은 KEDO, TRADP 등 북한에 대한 다자간 국제협력 사업의 실행과 함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전도를 밝게 했다. 동북아지역 개발금융기구의 설립, 동북아 에너지연계망의 구축, TKR-TSR연결 등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구상들이,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2년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로 탄력을 받았으나, 2002년 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문제로 다자간 국제협력사업과 구상들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다자간 국제협력사업과 구상들은 동북아 지역에 정부간 협의체를 탄생시키고, 동북아지역을 신성장축으로 부상시키며, 북한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으나 참여국 확대의 제약, 신의주 특구의 지원 실기, 제네바합의체제의 유지 실패라는 한계점도 드러내었다. 한반도 관련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 관리에 있어서 제네바합의보다 우월한 체제를 만들 수 있으며, 핵해법의 모색은 북한경제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기획논단

I. 서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경제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수반해 왔다. 남북한 경제관계의 성장과 함께 북한의 내부경제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잉태되었다. 1999년 이후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 기조가 정착되면서 북한 당국의 새로운 경제실험이 증대된 것이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화폐화와 시장화가 진전된 것이나 경제특구가 개성, 금강산 등으로 확대(2002.11)된 것은 이러한 기류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남북한 경제관계나 북한의 내부경제관계와는 달리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199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¹⁾가 부메랑이 되어 북한경제의 국제화를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즉,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실패를 거울삼아 북한관 홍콩건설을 추진했던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은 시작에서부터 좌초하고 있고, 북·미 국교정상화 과정의 중요한 담보였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 Korean Energy Development Orga-

nization)의 중유 제공 및 경수로 건설 사업은 중단되었으며, 북한경제 재건의 중요한 자금원으로 기능하게 될 북·일 국교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북·일 무역관계의 축소와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 증가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상징되는 북한경제의 구조개혁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북한의 당면과제인 체제유지와 경제재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이해된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하는 북한의 선군정치는 북한군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을 일반경제로의 상시동원체제 구축으로 귀결되면서 한때는 북한경제의 재건에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1998.8)로 국제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선군정치가 우라늄농축 핵개발의혹 공방(2002.10)에 이어 북한 외무성의 핵 보유 선언(2005.2) 등으로 증폭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는 물론 점차 동북아 전체의 경제적 번영에 큰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라늄농축 핵개발 문제가 제기된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발걸음도 바

1) 한호석에 의하면 “선군정치는 북·미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때인 1995년 1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방공포 부대를 시찰함으로써 창시되었다” 한다(한호석, “북 외무성의 2월 10일 성명과 조미관계의 새로운 국면”, 2005.2.14).

빠진 것은 사실이었다.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관련 6개국간의 6자회담 등 다자간 협력 틀이 만들어졌지만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KEDO사업, 두만강지역 개발프로그램(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사업 등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한반도 주변국들의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다자간 협력으로는 아직 귀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 동북3성 개발, 남북한 경제관계의 심화, 북한경제의 내부개혁 확대 등 긍정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속에서도 더 한층 고조되는 북한의 선군 정치를 감안할 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 주변국 간의 다자간 협력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으며, 다자간 협력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 고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히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전개에 유념하면서, 우선 북한을 대상으로 한 다자간 협력의 진행상황과 제기된 중요 구상들을 점검한 다음, 그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다자간 국제협력 실태와 중요 구상

김대중 정부의 등장(1998.2.25)이후 한반도에서 대북협력은 기존의 다자간 협력보다는 양자 협력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의 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자간 협력은 여전히 남북한 경제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받침돌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의미 있는 다자간 협력사업과 구상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1. TRADP사업

TRADP사업은 1991년부터 추진되어 온 소지역간 경제협력사업으로 동해로의 출해구를 가지지 못한 중국·몽골, 이를 보유한 북한·러시아, 그리고 개발경험이 있는 남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의 후원으로 동북아 주요 물류기지가 될 수 있는 두만강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접경 3국이 독자적인 경제특구 개발과 협력적인 인프라시설을 건설하여 중단기적으로 이 지역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 수송망을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된 사업이었다. TRADP사업은 1990년대 초반 동북아 경제협력의 고조 분위기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동북아 국가간에 의욕적으로

〈표 1〉 TRADP 사업의 추진단계와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1991~2004)

단계구분	주요 회의와 일시	장 소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
의욕적 추진기 (1991.7 ~ 1997.11)	UNDP 동북아소지역계획회의 (1991.7.6 ~ 7.7)	몽골 울란바토르	- UNDP TRADP사업을 동북아지역의 최우선사업으로 지정 - UNDP TRADP 개발 투자타당성 조사 실시
	UNDP 제2차 지역계획회의 (1991.10.16 ~ 10.18)	북한 평양	- 계획관리위원회(PMC)와 3개 분야 실무작업반(WG) 결성 합의
	제1차 PMC회의 (1992.2.27 ~ 2.28)	한국 서울	- 분야별 실무작업반 구성·운영방안 검토 및 각국대표단(NT) 중심 운영합의 - TRADP 개발방안, 대상지역, 자원조달문제 등 논의
	제2차 PMC회의 (1992.10.9 ~ 10.11)	중국 북경	- TRADP 추진관련 4가지 기본원칙 합의 - 이원화(5개국/3개국)된 정부간 조정기구 설립 합의
	제3차 PMC회의 (1993.5.9 ~ 5.10)	북한 평양	-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협정 잠정안 확정 -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설립 및 정부간 조정·협의위원회(Commission) 창설에 관한 협정 잠정안 확정
	제4차 PMC회의 (1994.7.15 ~ 7.16)	러시아 모스크바	- Commission 협정문 합의 - 환경 양해각서 합의 완료 - 지역개발전략 확정(점진적 조화)
	제5차 PMC회의 (1995.5.29 ~ 6.2)	중국 북경	- Commission 협정문 및 환경양해각서 서명 - 두만사무국 설치문제 논의 - 교역, 투자, 인프라 등 6개 분야 사업우선순위에 대해 잠정 합의
	제6차 PMC회의 (1995.12.4 ~ 12.7)	미국 뉴욕	- Commission 협정문 및 환경양해각서 서명 - Commission 산하에 통신, 인프라, 환경 등 실무작업반 및 Committee 산하에 조정·조화·홍보 실무작업반 설치
	제1차 Commission회의 (1996.4.18 ~ 4.19)	중국 북경	- 사무국 소재지는 3년간 북경으로 하되, 이후는 5개국간에 순환 - 사무국 운영경비는 연 25천 달러씩 5개국 균등부담 - 중장기('96.7 ~ '97.12)사업계획 심의
	제2차 Commission회의 (1996.10.21 ~ 10.23)	중국 북경	- 자원조달문제, 두만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97년도 사업계획 토의 - 일본의 Commission회원국 가입권유 결의안 채택
구조 조정기 (1997.11 ~ 2002.6)	제3차 Commission회의 (1997.11.18 ~ 11.20)	중국 북경	- 인프라확충용 자원조달방안 논의(두만지역 개발금융 설치 구상 발표) - 제2단계 사업계획('97 ~ '99) 서명 - 일본 옴세버지위 유지로 결정
	제4차 Commission회의 (1999.6.8 ~ 6.11)	몽골 울란바토르	- 동북아·두만투자공사 설립안 논의 - TRIS 투자네트워크 구축 합의
	제5차 Commission회의 (2001.4.5 ~ 4.6)	중국 홍콩	- 3단계('01 ~ '03)사업계획 확정·서명 - 일본의 회원국 가입을 적극 추천 - TRADP사업 대상지역 확대 - 회원국의 역할 강화 합의
재도약 모색기 (2002.6 ~ 현재)	제6차 Commission회의 (2002.6.1 ~ 6.3)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 일본 가입을 위해 UNDP가 일본정부와 접촉 - ADB의 역할 재조명과 북한, 러시아 회원가입 희망
	제7차 Commission회의 (2004.7.8 ~ 7.9)	중국 북경	- 2005년 이후에도 TRADP에 대한 UNDP의 프로젝트별 지속적 지원 약속 - 향후 사업운영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위주로 진행

추진되었지만 우여곡절도 많았던 사업이었다. 북한에 초점을 맞출 경우 TRADP사업의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 의욕적 추진기

(1991.7 ~ 1997.11), 구조 조정기(1997.11 ~ 2002.6), 재도약 모색기(2002.6 ~ 현재)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참조).

가. 의욕적 추진기(1991.7 ~ 1997.11)

제1단계는 1991년 7월 UNDP의 동북아 소지역계획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 Meeting) 참가국중 일본을 제외한 남·북한,²⁾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의 두만강지역 개발사업 참여에서 북한이 TRADP 제3차 정부간 회의(Commission/Committee)의 평양개최를 포기할 때까지로 UNDP의 주도로 동북아 5개국이 의욕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였고, 여러 성과를 이루어내었던 시기였다.

첫째는 지역개발전략이 점진적 조화방식(Progressive Harmonization)³⁾으로 합

의됨에 따라 두만강지역 개발방식을 둘러싼 초기의 이견이 해소되고 2건의 국제협정과 1건의 양해각서가 조인되어⁴⁾ TRADP 사업이 다자간 협력사업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로서 기존의 계획관리위원회(Program Management Committee : PMC)는 산하에 두만사무국(TRADP 사업의 행정적 지원)과 작업그룹(투자촉진, 통신, 인프라, 환경, 관광 등)을 둔 협의위원회(Commission : 경제, 기술, 환경, 투자 등 제분야의 협력 촉진 및 지원)와 조정위원회(Committee : 접경국가의 주권문제 및 상호이해 조정)로 대체되었다.

둘째는 소요자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부족하였지만⁵⁾ UNDP를 통한 동북아 5개국간의 두만강지역 개발논의는 엄청

- 2)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 회의에서 북한은 라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하고 청진, 라진, 선봉항을 동북아의 교통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 3) 북한의 라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약 1,000km²지역의 두만강경제구역(Tumen River Economic Zone : TREZ), 즉 소삼각의 공동개발 가능성은 열어두되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경 3국의 실정에 맞게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러시아의 나호트카를 연결하는 약 5,000km²지역의 두만강경제개발지역(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 TREDA), 즉 대삼각을 대상으로 하여 각 접경국이 독자개발을 추진하면서 관련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 및 경제활동의 여건을 일치시켜 나가고 상호연계된 인프라망을 건설한다는 방식이다.
- 4) 1995년 12월 제6차 PMC회의에서 서명된 2건의 국제협정은 5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위원회(Consultative Commission)와 접경 3국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의 구성이며, 1건의 양해각서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inciples Governing the Tumen Economic Development Area and Northeast Asia)이다.
- 5) UNDP 기술조사단은 1달간의 조사활동(1991.8.20 ~ 9.21)을 통해 소삼각을 중심으로 10개 내지 11개의 근대적 항구와 5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및 관련시설을 갖춘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향후 20년간에 걸쳐 소요될 동 지역의 장기개발비용은 개략적으로 ①도시개발, 전력, 통신 등 지역 인프라 130억 달러, ②항만, 내륙수송기지, 공항,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110억 달러, ③교육 10억 달러, ④에비비 50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으나 구체적 실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Miller M., A. Holm, and T. Keller,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 Mission Report*, UNDP, Consultation with Participant

난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켜 TRADP 사업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되었다는 것이었다. TRADP 사업 추진은 이 지역에 대한 각국의 내자 동원을 통한 인프라 정비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철도, 도로, 해상수송로 등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간 상호 인프라 연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두만강지역 외자유치능력의 꾸준한 개선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셋째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지대한

공헌이었다. 즉,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간에 핵문제가 타결된 이후 북한의 TRADP 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개혁·개방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①외국인투자 관련법령 정비가 가속화되면서 동기간 동안 16개의 법과 41개의 규정이 공포되었고,⁶⁾ ②환율 현실화, 시장경제활동의 일부 허용 등 자본주의 실험이 이루어졌으며,⁷⁾ ③바람직한 개발방식에 대한 검토⁸⁾ 등이 바로 그

〈표 2〉

TRED A지역의 외국인 투자의 추이와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연변지역	라진·선봉	프리모스키	몽 골	합 계
1985~1993	42	1	141	10	194
1994	61	1	2	29	93
1995	78	4	53	46	181
1996	134	31	97	41	303
1997	95	26	95	42	258
1998	47	25	56	45	173
1999	33	NA	54	72	159
2000	29	NA	78	107	214
2001	32	NA	66	125	223
합 계	551	88	642	517	1,798

자료 : Tumen Secretariat,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Foreign Direct Investment" (<http://www.tumenprogramme.org/tumen/sectors/Investment/fdi>).

Governments, Pyongyang, pp. 16~18, October, 1991 또는 통일부 교류협력국, 『두만강지역 개발관련 UNDP 기술조사단 타당성조사 보고서』, 1991.12).

6) 공표된 법령의 수는 1997년 5월말 누적기준이다.

7) 1997년 6월 1일 단행된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북한의 자본주의실험은 ①변동환율제의 실시와 환율의 현실화(라진·선봉지역은 달러당 210원, 여타지역은 달러당 2.2원), ②여관, 음식점, 가공식품, 수리수선, 부업생산 등의 분야에서 개인의 시장경제활동을 양성화하는 자영업(가내편의봉사업)의 허용, ③지대내 시장가격 적용 확대, ④독립채산제의 실시에 의한 기업소들의 경영 자율성을 증진하는 조치 등을 담고 있었다.

8) 북한의 경제관료들은 북한의 실정에 적합하면서도 국제시장으로의 접근도 가능한 경제특구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1996년 8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정우 위원장은 인터내셔널 트리뷴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라진·선봉지대의 모델을 굳이 말한다면 싱가포르이며,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지대들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 싱가포르형이 우리에게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지만, 라진·선

것이였다.

나. 구조 조정기(1997.11 ~ 2002.6)

제2단계는 TRADP 제3차 정부간 회의의 평양개최를 포기한 이후 북한이 TRADP 정부간회의에 불참하다가 다시 참여를 시작한 TRADP 제6차 정부간 회의까지로 동북아 5개국간 TRADP사업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던 시기였다.

우선 1997년 중반에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분수령이였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이 바뀌면서 TRADP 사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TRADP 정부간 회의의 평양 개최를 포기한 북한이 연속적으로 정부간 회의에 불참하였으며,⁹⁾ 동기간중 TRADP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다.

첫째는 TRADP의 북한측 지역인 라진·선봉지대의 법적 위상이 비록 약화되었지만 재조정되어 1998년 헌법 개정에서 시사한 대로 특수경제지대의 하나로 재탄생(1999. 2.26)하고, 이후 개혁·개방 확대의 밑거름

이 된 것이였다. 즉, 이 시기에 집중된 헌법 개정을 필두로 한 기존 외자관계법령의 수정보충과 새로운 법령의 제정은 점진적이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관련법규가 점차 현실화되고 국제화되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표 3> 참조).

둘째는 북한이 불참한 TRADP의 제4차 정부간 회의에서 ‘특정지역의 개발을 넘어 국가간 공동협력을 중시’하는 사업방향의 합의였다. 이후 TRADP의 제5차 정부간 회의에서 북한의 청진, 중국 연길, 러시아 나호트카로 규정되어 있던 TRADP의 대상지역을 몽골,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북한이 추진한 것이였다. 이로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연해주로 국한되어 있던 북한의 대 TRADP 전선이 요령성, 흑룡강성 등 중국 동북3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림과 동시에 일본의 TRADP 참여명분이 제고되었다.

다. 재도약 모색기(2002.6 ~ 현재)

제3단계는 북한이 다시 참여를 시작한 TRADP 제6차 정부간 회의에서 현재까지로 북한의 대 TRADP 전략에 중요한 전환

봉지대 개발과정에서 싱와물산(주)와 도요엔지니어링의 중화학개발구상(1996.9 : 라진·선봉투자설명회) 등 여러 대안적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경제관료들의 국제적 시야는 개선되고 있었다.

9) 1997년 후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총비서로 공식취임한 이후부터 TRADP의 북한측 지역인 라진·선봉 개발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평양으로 예정되었던 TRADP의 제3차 정부간 회의의 개최 포기를 신호탄으로 TRADP의 제4차 정부간 회의 및 제5차 정부간 회의에 연속 불참함에 따라 TRADP의 핵심적 연결고리중 하나인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은 사실상 표류단계에 진입하였다.

〈표 3-1〉 북한의 주요 외자관계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동향

주요법령/단계구분	의욕적 추진기 (1991.7 ~ 1997.11)	구조 조정기 (1997.11 ~ 2002.6)	재도약 모색기 (2002.6 ~ 현재)
사회주의 헌법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1992.4.9)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1998.9.5)	
외국인투자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로 채택(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1999.2.26)	
라선경제구역지대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1993.1.3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1999.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2002.11.7)
합영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4호로 수정보충(1994.1.2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1999.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2001.5.17)	
합작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1999.2.26)	
외국기업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1999.2.26)	
토지임대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로 채택(1993.10.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1999.2.26)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로 채택(1993.1.3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1999.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2001.5.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2002.11.7)
외국투자은행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로 채택(1993.11.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1999.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2002.11.7)
외화관리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7호로 채택(1993.1.3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1999.2.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52호로 수정보충(2002.2.21)	

출처 : 평양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2004.8.

* 북한법에는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으나 여기서는 약식으로 표현한다.

이 발생한 시기이다. 라진·선봉 실패 이후
표류하던 북한의 대 TRADP 전략의 변화
는 이미 구조 조정기부터 잉태되고 있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러 정상회담이 바

로 그것이었고, 외자관계법령의 재정비에
이어 2001년부터 내걸린 ‘신사고’와 ‘경제발
전’의 기치가 신호탄이었으며,¹⁰⁾ 그것은 대
외적으로 3가지 방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형성하였다.

10) 2001년 1월 4일자 로동신문은 “오늘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높이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라는 김정일의 연설내용을 인용하면서 ‘21세기의 신사고’라는 논설을 싣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극동방문을 동행 취재하고 여러 차례 김정일과 인터뷰를 한 러시아의 올가 말리체바 기자는 “김정일은 최근 수십년간의 중국, 베트남, 러시아의 개혁·개방 경험을 주의 깊게 연

〈표 3-2〉 북한 주요 외자관계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동향

주요법령/단계구분	의욕적 추진기 (1991.7 ~ 1997.11)	구조 조정기 (1997.11 ~ 2002.6)	재도약 모색기 (2002.6 ~ 현재)
세 관 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1호로 수정보충(1993.11.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1999.1.2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68호로 수정보충(2001.7.26)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04호로 채택(2000.4.19)	
가 공 무 역 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78호로 채택(2000.12.26)	
화 폐 유 통 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5호로 채택(1998.11.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89호로 수정보충(2003.6.5)
대 외 경 제 계 약 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2호로 채택(1995.2.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1999.2.26)	
민 사 소 송 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7호로 수정보충(1994.5.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69호로 수정보충(2002.10.24)
대 외 경 제 중 재 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5호로 채택(1999.7.21)	
대 외 민 사 판 계 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2호로 채택(1995.9.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1998.12.10)	
공 증 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1호로 채택(1995.2.2)		
보 험 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8호로 채택(1995.4.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1999.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38호로 수정보충(2002.5.16)	
금강산관광지구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로 채택(2002.11.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보충(2003.4.24)
개성공업지구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택(2002.11.2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보충(2003.4.24)
원산지명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64호로 채택(2003.8.27)

출처 : 평양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2004.8.

* 북한법에는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으나 여기서는 약식으로 표현한다.

첫째는 남북경제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의 선회였다. TRADP 정부간 회의에서 남북 당국자들간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간접적 대화의 성격이 강했고, TRADP의 북한측 지역인 라진·선봉에 대한 한국자본의 공식적 참여를 북한은

구해 왔다. 그는 조국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통제 불가능한 정치적 변혁을 차단하는 모델을 모색중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올가 말리체바 지음/박정민·임을출 옮김, 『김정일과 왈츠를 : 러시아 여가자의 김정일 극동방문 동행취재기』, 한울, 2004, 6쪽).

허용하지 않았다.¹¹⁾ 아직 남한 기업의 라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접근이 봉쇄되어 있는 하나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 해결·청산결제에 관한 4대 경험합의서가 남북한간에 발효(2003.8.20)되고,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이 내부 법제화과정을 마침에 따라 향후 남한자본의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증진되었다.¹²⁾

둘째는 동해경제권에 대한 러시아 역할의 재조명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구소련의 해체와 한·소 수교(1990.9)이후 북·러 경제관계는 그동안 소원했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스크바(2001.8) 답방으로 북한 동해경제권과 러시아 극동경제권과의 연계문제가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다.

2002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극동방문에서 시베리아횡단철로(TSR)와 한반도중단철로(TKR)의 연결이 양국정상간 합의되고,¹³⁾ 라진항과 블라디보스톡항간의 협력문제가 거론되면서 라선지대의 경제적 위상은 점차 되살아나고 있었다.¹⁴⁾

셋째는 중국 요령성과의 연계를 통한 북한경제의 국제화전략 구상이었다. 그것은 신의주에 북한관 홍콩을 건설하겠다는 신의주특별행정구법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 구소련경제와의 연결고리가 차단된 이후 북한경제는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라선·선봉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UNDP의 두만강 개발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서방세계로의 진출을 기도했다. 그렇지만 중국 길림성을 통한 중국경제와의 연계가 <표 4>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구소련 경제의

- 11) 남한자본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라선지대에 대한 북한의 외자유치는 지난 10년간 약 1억 3,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TRADP 제7차 정부간 회의 : 2004.7). 연간 1,000만 달러 수준의 외자를 북한이 라선·선봉지대에 유치한 셈이다. 현재 중국, 일본 초총련, 태국 등의 기업이 라선지대에서 사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70~80%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12)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조는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은 남측 및 해외동포들이 한다. 외국인도 금강산관광을 할 수 있다”로,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는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남한을 공식적인 차원에서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였다. (평양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2004.8, 165쪽 및 176쪽).
- 13) 정상회담후 푸틴은 단독기자회견에서 “2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횡단철로와 한반도중단철로의 연결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밝혔는데, 올라 말리체바 기사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중단철도의 연결이 두 정상간에 합의되었다고 전하고 있다(올라 말리체바, 앞의 책, 98쪽).
- 14)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극동정상회담 이후 라선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동해경제권과 러시아 연해주간의 협력이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①TSR-TKR연결을 위한 남·북·러시아 회담, ②북한 라선항과 러시아 나호트카항간의 자매결연(2003.9.22), ③세르게이 다르킨 연해주 지사의 북한 공식방문(2003.10.1~10.4), ④러시아 극동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나호트카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의 이전 움직임(2003.10.14 : KOTRA 북한경제 속보), ⑤연해주 정부의 평양 러시아 정교회 건립에 1만 달러 기증(이타르타스 2004.18 : 2004년 8월 20일자 KOTRA 북한경제 속보에서 인용), ⑥러시아 스베르방크의 북한 대성은행 협력계좌 개설(2004.11.3 : KOTRA 북한경제 속보) 등이 이에 관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1990년 이후 북한과 주요국간의 무역추이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무 역 액	41.7	25.8	25.6	26.5	21.0	20.5	19.8	21.8	14.4	14.8	19.7	22.7	22.6	23.9	NA
남북교역액	0.1	1.1	1.7	1.9	2.0	2.9	2.5	3.1	2.2	3.3	4.3	4.0	6.4	7.2	7.0
주요국 무역액	중 국	4.8	6.1	7.0	9.0	6.2	5.5	5.7	6.6	4.1	3.7	4.9	7.4	10.2	13.9
	일 본	4.8	5.1	4.8	4.7	4.9	6.0	5.2	4.9	4.0	3.5	4.6	4.8	3.7	2.5
	러시아	22.2	3.7	3.4	2.3	1.4	0.8	0.7	0.7	0.5	0.5	0.7	0.8	1.2	NA

자료 : 통일부, KOTRA, 東アジア經濟情報(2005年 2月号)

대안이 되기는 역부족이었다. ①TRADP 대상지역의 확대, ②중국 경제개발 흐름의 북상 움직임, ③북한 EU국가간 관계개선, ④남북경제관계의 진전과 경의선 연결 논의 등 여러 여건이 북한의 신의주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일이 엉뚱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신의주특별행정구 초대장관으로 임명(2002.9.24)된 네덜란드 국적 화교인 어우야(歐亞) 그룹 양빈(楊斌) 회장이 탈세와 부동산관련 불법행위 등 중국 법규위반을 이유로 활동이 중지되고,¹⁵⁾ 신의주 개발문제를 둘러싼 북·중간의 의견조정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개발은 잠정 중단되게 된다.¹⁶⁾

2. KEDO사업

KEDO사업은 1994년 10월 21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미국의 대북관계개선 약속을 교환하는 포괄적인 기본합의문(Geneva Agreed Framework)하에 “미국이 책임지고 국제컨소시움을 구성하여 1,000MWe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함과 동시에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합의를 기초¹⁷⁾로 진행된

15) 양빈 신의주특별행정구장관은 2002년 10월 4일 요령성 공안당국에 의해 구금되고, 10월 8일 가택연금되었다.

16) 東アジア貿易研究會, “北朝鮮 經濟改革の中核 新義州特區の開発断念(東京新聞 11月 7日)”, 『東アジア經濟情報』 No. 137, 2004年 11月号, 15쪽 참조.

17)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북한 흑연감속로를 경수로 발전소로 대체하며,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노력하며, 북측은 비핵화 의무를 이행한다”는 합의문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네바 기본합의문은 ①북한은 흑연감속로와 핵관련시설을 동결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며, 5MWe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은 안전조치후 제3국으로 이전하며,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1,000MWe 경수로 2기를 제공하고, 흑연감속로 동결에 따른 대체에너지(중유)를 연간 50만 톤씩 제공하며, ②미국은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양국관계 개선시 이를 대사급으로 격상하며, ③미국은 대북 핵불사용을 보장하고,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에 착수하며, ④북한은 NPT 잔류 및 IAEA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며, 비동결 핵시설에 대해 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을 수용하며, 경수로 핵심

〈표 5〉 KEDO사업의 추진단계와 주요 이슈 및 진행상황

추진단계/구분	노형 결정기 (1994.10 ~ 1996.3)	재원 확보기 (1996.3 ~ 1999.12)	본공사 진행기 (1999.12 ~ 2002.11)	공사 중단기 (2002.11 ~ 현재)
단 계 별 주 요 이 슈	- 한국표준형경수로 채택문제	- 집행이사국간 재원 분담협상	- 제네바합의 수정론	- 경수로건설공사 계속 여부
사업추진환경	- 제네바합의 (1994.10)	- 잠수함 침투사건 (1996.9) - 김정일 사진 훼손 사건(1997.10)	-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2000.2) - GE사 핵사고책임 면책제공 요구(2000) 미국의 '악의 축' 지명 (2002.1) - 북한의 우리농축 핵개발문제(2002.10)	- 북한의 NPT탈퇴 유보철회(2003.1) - 6자회담합의(2003.7) - 미국의 '폭정의 잔존 지역' 규정(2005.1) - 핵보유선언과 6자 회담참가의 무기한 중단(2005.2)
사업추진체계 구 축 상 황	- KEDO설립(1995.3) - 북한과 경수로공급 협정체결(1995.12) - KEDO의 주계약자 선정(1996.3)	- 5개 의정서 발효 (1996 ~ 1997) - 집행이사국으로 EU영입(1997.9) - KEDO-한·일간 차관공여협정 체결 (1999)	- 본공사계약 체결 (1999.12) - 3개 의정서 추가 발효 (2000 ~ 2001) - 북한의 발전소건설 허가발급(2001.9)	- 경수로공사 1년 중단 결정(2003.11) - 경수로공사중단 1년 연장(2004.11)
경 수 로 건 설 동 향	- 부지조사단 방북 시작 (1995.8)	- 경수로건설 착공식 (1997.8)	- 본관 기초굴착공사 시작(2001.9) - 최초 콘크리트타설 기념식(2002.8)	- 공사중단 : 종합 공정율 34.54% (2003.11)
기타 제네바 합 의 이 행 상 황	- 경제제재완화조치 시행(1995.1) - 중유제공시작 (1995.1)	- 폐연료봉 봉인작업 시작(1996.4) - 경제제재 완화조치 시행(1998.11)	- 폐연료봉 봉인작업 완료(2000.3)	- 중유제공 중단 (2002.11) - 핵연료봉 재처리 시작(2002.12 ~)

사업이었다.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할 때, KEDO사업의 진행과정은 크게 4단계, 노형 결정기(1994.10 ~ 1996.3), 재원 확보기(1996.3 ~ 1999.12), 본공사 진행기(1999.12 ~ 2002.11) 공사 중단기(2002.11 ~ 현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표 5〉 참조).

가. 노형 결정기(1994.10 ~ 1996.3)

제1단계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에서 한전을 KEDO의 주계약자로 선정(1996.3)하기까지로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노형의 결정과 KEDO사업의 추진골격을 확정하였던 시기였다.

부품 인도이전에 특별사찰을 전면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배중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안충영·이창재 엮음, 『동북아경제협력 :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3, 179쪽).

우선 KEDO사업의 추진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통일원 산하에 경수로지원기획단이 설치(1995.1)되었고, 국제적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경수로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담당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1995.3.9)되었다.

미국의 대북관계개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제재완화조치도 단행되었다. 기본합의문의 이행구도에 따라 ①동결자산의 일부(제3국인 소유)해제, ②제3국과의 거래시 미국은행체계의 사용(북·미간의 직접금융 거래는 불허), ③마그네사이트 교역 허용, ④직통전화 및 언론사 사무소 설치 허용, ⑤북한여행 자유화 및 신용카드 사용 등 관련은행 금융거래의 허용, ⑥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세부사항 마련 등의 경제제재완화조치(1995.1.20 및 2.14)에 이어 미국 스탠턴그룹의 대북투자 허용, 국제농업개발기금의 대북잠업차관 표결시 기권 등 추가 선별적인 완화조치도 이루어졌다.¹⁸⁾

그러나 진행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KEDO 설립시 합의된 한국표준형 경수로

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북한의 반대가 바로 그것이었다. 칼라룸푸르 북·미준고위급회담(1995.5.19 ~ 6.13)에서 “노형과 주계약자를 KEDO가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힘겹게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1995.12.15)되고, KEDO의 주계약자 선정(1996.3.20)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재원 확보기(1996.3 ~ 1999.12)

제2단계는 KEDO의 주계약자 선정(1996.3.20)에서 경수로 본공사계약이 체결(1999.12.15)되기까지로 제네바합의의 이행에 필요한 경수로건설 자금과 중유제공 자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였다. 1996년 4월 의정서협상이 시작된 이후 KEDO사업은 세 가지 방향에서 난관이 조성되었고 그를 극복해야만 했었다.

첫째는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파생된 문제가 경수로건설 추진일정에 장애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6년 9월에 발생한 잠수함 침투사건과 1997년 10월에 발생한 ‘김정일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 훼손사건’이었다.¹⁹⁾

18) 1989년에도 비상업분야(체육, 학술, 문화 등)에서 미국시민권자의 여행주선업 허용, 일부 정보물자(출판물)의 대북수출관련 금융거래 허용, 인도적 물품(식량, 의약품, 의료기재 등)의 대북수출 허용 등 일부 완화조치가 있었다(배종렬,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완화가 남북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 배종렬·박유환 편, 『남북한 경제협력 :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0.4, 45~46쪽).

19) 한때 북한이 실포 금호지구 공사현장의 남한 근로자들의 임시숙소를 봉쇄하고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 시키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제8차 부지조사단의 방북이 연기되고 경수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배종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북한의 경제정책”, 배종렬·박유환 편, 『남북한 경제협력 :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0.4, 45~46쪽).

〈표 6〉 중유의 연도별 공급량과 비용현황

(단위 : 톤, 백만 달러)

연 도	공 급 량	총 비 용	미국부담액
1995	150,000	16	5.5
1996	500,000	67	22
1997	500,000	65	21
1998	500,000	49	46.4
1999	500,000	62	61.6
2000	500,000	95	60.6
2001	500,000	80	70.3
2002	411,227*	77.3	60.2
합계	3,561,227	511.3	347.5

* 2002년 12월부터는 KEDO집행이사회 결정(11.14)에 따라 중유공급이 중단

둘째는 KEDO사업에 대한 미국 의회의 소극적인 협조였다.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 행정부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북한에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였다. 〈표 6〉에서 시사하고 있듯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은 EU를 KEDO 집행이사국으로 참여(1997.9.19) 시키는 한편 일반회원국의 확대²⁰⁾를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셋째는 중유제공에 대한 미국 의회의 소

극적인 태도가 KEDO의 경수로건설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초기 KEDO 집행이사국 간 분담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²¹⁾ 지리하게 진행되던 재원분담협상이 가닥을 잡은 것은 한국의 경우는 ‘중심적 역할’로, 일본의 경우는 ‘의미 있는 역할’로, EU의 경우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로, 미국의 경우는 ‘특별한 기여’라는 합의였다.

재원분담합의(1998.11.9)가 구체화되면서²²⁾ 특기할만한 조치가 진행되는데, 그것

제, 한국수출입은행, 2000.4, 5쪽).

20) 미국의 권유로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폴란드, 아르헨티나, 칠레, 체코, 우즈베크 등 10 개국이 일반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된다.

21) KEDO 집행이사국간에 재원분담협상이 진통을 거듭함에 따라 경수로 착공식이 늦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있었으나, KEDO 집행이사국간의 재원분담협상을 경수로 착공 이후로 연기하고 초기현장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함(1997.8.16)에 따라 경수로 부지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된다(배종렬, 앞의 논문, 2003, 180쪽).

22) 재원분담합의 이후 KEDO에 대한 일본의 차관공여협정 체결(1999.5.3) 및 국회 승인(1999.6.29), 한국의 차관공여협정 체결(1999.7.2) 및 국회 승인(1999.8.12) 등이 이루어지는데, 집행이사국간에 합의된 KEDO사업비 구조는 다음과 같다. 경수로 예상사업비를 46억 달러(환율 1달러당 1,100원, 물가상승율 연 2.1%)로 확정하고, 한국이 실제공사비의 70%(약 32.2억 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부담하고, 일본은 1,165억엔(10억 달러)을 정액으로 기여하며, 미국은 중유비용 및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EU는 7,500만 유로를 기여한다는 것이었다(통일부, “대북경수로 사업비 재원분담결의

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2단계 경제제재 완
화조치였다. 1999년 9월 17일 발표된 경제
제재완화조치에는 ①북한산 원자재 및 대부
분 상품의 미국내 수입, ②미국산 소비재
및 금융서비스의 대북수출(민감한 분야 제
외), ③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수
송, 도로건설, 관광산업 분야의 투자, ④미
국 민간인들의 북한친지 및 개인에 대한 송
금, ⑤미국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일반화
물의 대북 운송, ⑥북·미간 상업용 항공기
운항 등이 포함되었다.

다. 본공사 진행기(1999.12 ~ 2002.11)

제3단계는 경수로 본공사계약의 체결
(1999.12)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문제로 KEDO측이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
(2002.11)하기까지로 경수로 본공사 작업
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KEDO사업의 장
래를 둘러싸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간에 공방이 가열되면서 제네바합의의 근간
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었던

시기였다.

본공사계약 체결 이후 ①북한의 발전소
건설허가 발급(2001.9.1)과 북한시찰단의
울진 원자력발전소 훈련시설 방문(2001.
12.17), ②발전소부지 기초굴착공사 착공
(2001.9.3)과 최초 콘크리트타설 기념식의
거행(2002.8.7), ③제2단계에서 타결된 특
권·면제 및 영사보호, 통행, 통신, 부지인
수, 서비스이용 의정서에 이어 미지급시조
치, 훈련, 품질보장 및 보증 등 3개 의정서
의 추가타결,²³⁾ ④그리고 1996년 4월에 시
작된 폐연료봉 8,000여개의 봉인작업이 완
료(2000.3)된 것 등은 긍정적 요소였다.
부정적 요소는 북한과 미국 양쪽에서 나오
기 시작했다. 우선 본공사의 진행에 장애가
되었던 것은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2000.
2)에 이은 노무인력의 철수(2000.4)²⁴⁾와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운영능력을 우려한 미
국 GE사의 한국 및 미국정부의 핵사고책임
면책제공 요구였다.²⁵⁾ 이에 대해 KEDO는
한국 노무인력과 우즈벡 노동자의 대체투입

안 채택” 보도자료, 1998.11.10).

- 23) KEDO측의 중유제공조치가 단행되기 전 의정서 협상은 마무리된 8개의 의정서에, 협의중이었던 원자력손
해배상 1개의 의정서, 그리고 인도일정, 상환조건, 사용후 연료, 핵안전 및 규제 4개의 의정서는 미협의중
이었다.
- 24) 북한은 2000년 2월 대북경수로 건설현장에 투입된 북한 노무인력의 인건비 증액(US\$110→US\$600)을
KEDO에게 요구하고 동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북한 노무인력의 철수방침을 통보했다. 그리고 2000년
4월 1일에는 32명, 4월 14일에는 70명의 노무인력을 실제로 철수하였다.
- 25) AP News와 LA Times(2000.4.12)가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표면화되게 되는데, 원래 원전공사 완
공후 핵사고시 배상책임은 원전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이고, 대북 경수로공급협정(Supply
Agreement Article XI)에서도 북한이 모든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GE사는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경우 경수로사업에 불참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지만, 핵사고 책임 면책제공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함에 따라 GE사의 의견은 관철되지 않았다.

을 통해, 그리고 히다치/도시바(Hitachi/Toshiba)사로 터빈/발전기 공급사의 대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²⁶⁾

그러나 제네바합의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본질적인 쟁점이 점차 불거지고 있었다. 제네바합의 당시 약속한 경수로 인도시기가 2003년이라는 점이,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부정적 대북인식이 도화선이었다. 핵사고시 소외전력문제(off-side power) 등 의회차원의 제네바합의 수정론이 행정부 관료의 화력발전소 대체 주장 등 경수로 대안론으로 이어짐에 따라²⁷⁾ 북한도 핵합의 파기 가능성 시사와 전력손실 보상요구로 그 대응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²⁸⁾

라. 공사 중단기(2002.11 ~ 현재)

제4단계는 KEDO측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2002.11.14)이후부터 현재까지로

KEDO사업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이다. 우선 본공사 진행기(1999.12 ~ 2002.11)에 있었던 ‘악의 축’ 지명(2002.1.29)²⁹⁾이 새로운 북·미관계 긴장의 서곡이었다. 일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북·일 평양선언(2002.9.17),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2002.9.19) 등 개혁·개방의 확대정책을 선택했다. 그러나 믿었던 신의주특구 개발은 중국측의 반대로 개발초기부터 삐걱거리고, 북한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에너지도입이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개발로 인한 미국측의 중유제공 중단조치로 차질이 발생하고, 북·일관계의 정상화에도 제동이 걸리자 2003년부터는 대미강경정책으로 선회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된다.

26) 한국 노무인력의 대체투입은 2000년 6월부터, 우즈베크 노동인력의 대체투입은 2001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터빈/발전기 공급사 문제는 KEDO집행이사회의 의결(2000.12.6)을 거쳐 2001년 2월부터 설계에 착수하였다.

27)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 교육센터 소장의 KEDO사무총장앞 서면질의([http://www.nautilus.org/napsnet/sr/Sokolski Letter to KEDO. txt](http://www.nautilus.org/napsnet/sr/Sokolski%20Letter%20to%20KEDO.txt) : December 22, 2000, KEDO Response to Sokolski. txt : January 16, 2001, Sokolski Response to KEDO Letter. txt : January 29, 2001) 참조,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담당 차관보의 화력발전소 대체주장(북·미 제네바합의에 관한 워크숍 : 우드로 윌슨센터, 2001.2.30), 제임스 릴리 전주한미대사의 플루토늄의 생산가능성과 중유비용 증대를 이유로 한 제네바합의 수정론(헤리티지 재단연설 : 2001.3.1),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공화·민주 양당 중견의원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할 때까지 북한과의 핵발전 거래를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는 부시 대통령앞 서한(로스엔젤레스 타임스, 2001.3.3) 등이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었다(배종렬, 앞의 논문, 2003.12, 193~194쪽 및 204쪽 참조).

28) 2001년 2월 21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기본합의문을 이행치 않을 경우 핵동결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2001년 3월 3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중앙통신 회견을 통해 전력손실 보상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29)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시작되면서 북·미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첫째, 북·미간의 긴장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2002.10.3 ~ 10.5)에 의해 우라늄 농축 핵개발문제가 제기된 이후 미국은 ①중유제공 중단(2002.11.14), ②미사일 부품선적 북한 화물선의 나포(2002.12.10), ③맞춤형 봉쇄정책 채택가능성 시사(2002.12.28일자 미국 언론 보도), ④경수로공사 중단 발효(2003.12.1), ⑤폭정의 잔존지역(Outposts of tyranny) 규정(2005.1.18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 지명자)으로, 그리고 북한은 ①플루토늄 방식에 의한 핵개발재개 선언(2002.12.12), ②NPT탈퇴 유보선언 철회(2003.1.10), ③북한 외무성의 핵연료봉재처리 보도(2003.4.18), ④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 선언(2005.2.10)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둘째, 북·미간의 긴장고조 상황과 비례하여 북한 핵문제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을 위시한 한반도 주변국들

의 중재노력이 강화되었다. 한국은 장관급 회담 등 기존 남북대화 채널을 활용하여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³⁰⁾ 미·중은 부시·장쩌민 정상회담(2002.10.26)을 통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원칙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천명되면서 이후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틀인 6자회담³¹⁾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된다.

셋째는 제네바합의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 경주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연간 50만 톤의 중유 확보, 2기의 경수로 건설, 대미관계의 개선 등을 약속받았다. 특히, 경수로 건설은 제네바합의체제의 근간이었다. 이미 대미 관계개선이 불투명하고 중유제공이 중단된 상황에서 경수로공사마저 폐기된다면 향후 한반도에서의 상황전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³²⁾ 경수로 건설의 일시중단과 그 기간 연장³³⁾은 북·미 긴장구도에서 유일한 해결

30)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후 우라늄농축 핵개발문제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입장(2002.10.25)인 외무성 담화는 ①북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②핵무기는 물론 그 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 ③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④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이 핵문제 해결의 현실적 방도다라는 4가지 논점이었다.

31) 2003년 7월 14일 다이빙귀 중국 외교부 수석부부장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후 6자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타면서 7월 31일 북한이 한국·러시아를 비롯한 관계국에게 6자회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2) 경수로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2003년 11월말 종합공정율이 34.54%(종합설계 : 62.26%, 시공 : 21.56%, 터빈발전기 : 47.54%, 원자로설비 : 69.54%, 보조기기 : 20.59%, 시운전 : -)에 이르렀고, 2004년 11월말 기준으로 15.3억 달러가 이미 투입되었다(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경수로사업 추진현황, 2004.11.30).

33) 2003년 11월 KEDO집행이사회는 1년간 경수로사업을 일시중단한데 이어, 경수로사업 중단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2004.11.26).

책이 되었다.

3. 여타 다자간 협력의 중요 구상

이미 진행중인 TRADP, KEDO사업을 제외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하며 향후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결실을 맺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TRADP, KEDO사업과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 구상은 크게 3가지 부문, 즉 ①금융, ②에너지, ③물류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는데, 이들 사업안들은 모두 북한경제의 취약점 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 금융부문의 사업 : 동북아지역 개발금융기구의 설립

동북아지역의 개발을 담당할 지역개발 금융기구를 설립하자는 구상은 1990년대 초반 동북아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타고 제기된 안³⁴⁾으로 TRADP의 정부간 회의에서도

논의되었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³⁵⁾ 그렇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경제협력의 분위기를 타고 북한 및 동북아지역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의 하나로, 그리고 동북아판 마샬플랜³⁶⁾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연계되면서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나 설립 당위성만큼 장애와 제약도 많은 구상이다.

동북아지역 개발금융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들이 제안되었으나 크게 정부주도의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자는 안과 민간주도의 동북아개발공사(Northeast Asia Develop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자는 안으로 대별된다. 남덕우 전총리를 필두로 해서 스탠리 캐츠 등 동북아경제포럼(Northeast Asia Economic Forum)의 안들은 대략 400억 달러의 자본금에 100~200억 달러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가진 은행 설립을,³⁷⁾ 김영호 교수(200~300억 달러 규모)³⁸⁾와 일본 동경제단(60억 달러 규

34) 최초 제안은 남덕우 전총리의 동북아개발은행 구상(1990.2)이었다(남덕우, “왜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한가?”,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판 마샬플랜』, 한겨레신문·동북아평화센터 공동주최 제정구의원 4주기 추모 기념 국제심포지엄, 한국수출입은행 대강당, 2003.2.14, 0-2-2쪽).

35) 예를 들어 TRADP 초기의 두만강지역개발회사(TRADCO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Corporation) 설립 논의, 두만사무국 창설 이후의 두만동북아투자공사(NEATIC : Northeast Asia Tumen Investment Corporation) 설립안 등이 그것이었다.

36) 동북아 마샬플랜의 일환으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자는 안은 김영호 전산자부장관이 1992년에 처음 제기하였다(김영호,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판 신마샬플랜의 구상”, 『동북아개발은행의 의미와 역할』, 동북아평화센터주관 아시아태평양연구회·21세기동북아연구회 공동주최 조찬토론회, 2000.10.13).

37) 남덕우, 앞의 글, 2003 참조.

38) 김영호, 앞의 글, 2000 참조.

모)³⁹⁾은 보다 적은 규모의 은행설립을 주장한 반면, 허즈번드(David Husband)는 TRADP 회의에서 초기 2억 달러, 5년이내 7~8억 달러 규모의 공사(Tumen/Northeast Asia Investment Corporation)부터 시작하자는 안⁴⁰⁾을 제시한 바 있다.

나. 에너지부문의 사업 : 동북아 에너지 연계망 구축

전력,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서 동북아연계망을 구축하여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자는 구상은, 특히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제네바합의의 수정론이 강해지면 서 단순한 미래의 청사진을 벗어나 현실적

인 이슈의 하나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문제제기는 세계은행의 자문역이었던 브래드리 뱍슨(Bradley O. Babson)이었다. “경수로사업이 북한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경수로의 대안론으로 천연가스 옵션을 공식적으로 주장(2002.6)하고 나선 것이었다.⁴¹⁾ 이어 쉘리그 해리슨은 경수로 건설자금 49억 달러면 경수로 1기와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2002.11)하였고,⁴²⁾ 미국 FSI사는 북한 전력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코러스 파이프라인-사할린 투 서울(KoRus Pipeline-Sakhalin to Seoul)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의사(2003.1)⁴³⁾를

39) 이강철, “동북아개발은행(NEADB)창설을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 : 동경제단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판 마샬플랜』, 한겨레신문·동북아평화센터 공동주최 제정규의원 4주기 추모기념 국제심포지엄, 한국수출입은행 대강당, 2003.2.14, I-3-1~I-3-19쪽).

40) TRADP 제3차 Commission회의에서 두만지역개발금융(TRDF) 설립에 관한 상세한 제안을 두만사무국이 할 것을 의결한 후 1998년 7월에 두만사무국측의 허즈번드는 두만동북아투자공사를 설립하자는 안을 마련하였다.

41) 브래드리 뱍슨(Bradley O. Babson)은 “에너지문제의 해결 각도에서만 본다면 경수로사업보다 북한의 기존 화력 및 수력발전소의 정상화와 개선, 그리고 그 분배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KEDO의 경수로 사업은 안전성, 군사전용 가능성, 북한의 운용능력, 자금상환능력, 유지보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경수로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합리적 방안은 가스옵션(Gas Option)이다”라고 하면서 가스옵션이야말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KEDO 참여국의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북한의 경제적 안정성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Bradley O. Babson, Senior Advisor to World Bank on DPRK, “Searching for the Right Side of History in Northeast Asia : Potential Role of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RINA REPORT*, Vol. June 2002, pp. 20~23).

42)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수로의 북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던 쉘리그 해리슨이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개발로 다시 불거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쉘리그 해리슨은 “경수로 건설에 한국은 2002년 말까지 8억 달러, 일본은 4억 달러를 투입했기 때문에 2기는 어려우나 1기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경수로 1기와 파이프라인 건설비는 대략 경수로 2기 건설비인 49억 달러와 맞먹을 것”이라며 사할린 가스전의 북한공급을 주장하였다(쉘리그 해리슨, “제네바합의 재협상해야”, 한겨레신문, 2002.11.18).

43) FSI(Foundation Systems Inc Energy)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동 프로젝트는 사할린의 라자예프로부터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북한과 남한을 잇는 약 2,3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표 7〉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계 대안별 한국 도착가격 추정

가스전	경 유 국	도 착 국	한국의 도입가격(US\$/Mbtu)	
			수 송 료	수송료 + 가스전비용
사 할 린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2,401	2,901~3,401
	러시아, 북한	한국	2,364	2,864~3,364
야 쿠 츠 크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2,795	3,295~3,795
	러시아, 북한	한국	3,083	3,583~4,083
이 르 쿠 츠 크	러시아, 몽골, 중국, 북한	한국	3,124	3,624~4,124
	러시아, 몽골, 중국	한국	3,153	3,653~4,153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3,027	3,527~4,027

출처 : 이상곤, “부문별 경제협력 : 에너지”, 안충영·이창재 엮음, 『동북아경제협력 :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3, 89쪽.

밝혔다.

에너지연계망⁴⁴⁾에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구상은 윤갑구씨의 평화망사업(Peace Network Project)이었다. 윤갑구(1997)는 평화망사업 3단계 추진방안에서 1단계는 남북한 전력계통을 연계하고, 2단계는 극동러시아와 남한 및 일본을 연계하며, 3단계는 러시아와 중국을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환상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⁴⁵⁾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남한의 전력공급은 이러한 흐름의 한 맥아로 판단된다.

다. 물류부문 사업 : TSR-TKR 연결

한반도중단철도(TKR) 재연결을 통한 유라시아철도 연결 구상은 한반도평화와 동북아경제협력의 상징사업으로,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냉전구조를 해체한다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었다. 1982년 처음으로 북한에 제시된 TKR사업에 대해 북한이 화답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였다. 2000년 제1,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울-신의주간 철도연결이, 2002년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시 동해선 철도연결이, 그리고 2002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에 TKR-TSR이 합의되면서 TKR-TSR 연결사업은 남북한과 러시아간

사업으로 코러스 파이프라인-사할린 투 서울(KoRus Pipeline-Sakhalin to Seoul)이라는 부제로 2003년 1월 7일 워싱턴포럼에서 비공개로 제기된 이후 시사저널을 통해 일반에 알려졌다(남문희, “북한 핵해법 : 코러스 프로젝트 떴다”, 시사저널, 2003.2.6/13, 90~96쪽).

- 44) 원래 전력계통망 연계안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경제적 수력발전 잠재량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시베리아-중국 연계안, 극동러시아-일본 연계안, 그리고 한국-일본-러시아-북한 환상망 등이 제시된 바 있으나, 아직은 아이디어 제시단계이거나 초보적인 검토수준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상곤, “부문별 경제협력 : 에너지”, 안충영·이창재 엮음, 『동북아경제협력 :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3, 92~93쪽).
- 45) 윤갑구, “통합독일의 서구전력계통으로의 연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전력계통연계의 비교검토”, 한국기술사회 한일합동심포지엄(1997.10.27) 및 대한전기학회 추계학술대회(1997.11.29).

에 당국간 회담이 열리면서 타당성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⁴⁶⁾

Ⅲ. 다자간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와 과제

1. 주요 성과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사업과 구상들은 서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체제전환중이기는 하나 과거 사회주의식 경제운영시스템이 아직 유지되고 있었고, 그동안 경제개발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서, 참여국가간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이해조정을 필요로 했으며, 아직 냉전이 해소되지 않아 정치·안보적 긴장요인이 높은 곳에서의 사업이었다. 또한 논의되는 사업도 대규모의 패키지형 사업으로 자금조달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전망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은 여러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가. 정부간 협의체의 탄생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관련된

현안 이슈를 논의하는 정부간의 다자간 협의체를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TRADP사업이 PMC로부터 출발하여 동북아 국가간의 다자간 협의체인 Commission/Committee로 발전한 것이나, 한·미·일을 중심으로 시작된 KEDO사업에 EU가 참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특히, TRADP과 KEDO사업은 서로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간의 실무적 대화를 가능하게 해 양측 정부관료들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TRADP 및 KEDO에서의 남북한 정부관료들간의 간접적 대화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당국간의 실질적 대화로 넘어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KEDO사업과 관련된 북·미간의 접촉은 양국간 대화·접촉선의 확대에 귀결되었다.

나. 신성장축으로 부상

다음은 TRADP과 KEDO사업이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이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 부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비록 TRADP사업이 참여국들이 기대한 수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나 인프라 건설로 연결되지는 못하였지만,

46) 북한 철도성 김용강 부상은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2004.3.5)에서 “TKR-TSR 연결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겐나니 파제예프 러시아 철도장관은 “TKR-TSR 연결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해 3차례 실사작업을 진행한 결과 연결사업에 약 20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KOTRA 북한팀, “북 철도성 부상, TKR-TSR 연결사업 촉구”, http://www.kotra.or.kr/main/trade/nk/nk_news, 2004.3.9).

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KEDO사업은 북·미간의 오랜 적대관계 청산의 상징사업으로 북한을 위시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TRADP사업은 동북아지역 국가간에 현안문제의 이해조정능력을 상승시켰다. 둘째, TRADP과 KEDO사업의 추진은 북한을 위시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해당 중앙정부의 관심증대를 이끌어내었다. 예를 들어 남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론 제창,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 발표, 러시아 푸틴 정부의 극동에 대한 관심증대와 TKR-TSR연결 프로젝트 추진,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발표 등이 TRADP과 KEDO사업의 추진에 힘입은 바 크다. 셋째, TRADP과 KEDO사업의 추진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 개발금융기구의 설립논의, 에너지연계망 구축 방안 등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에 이바지하였다.

다. 북한의 국제화 지원

마지막은 TRADP과 KEDO사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함의였다. 우선 TRADP의 PMC회의, Commission/Committee회의, 그리고 여러 실무작업반(WG : Working Group)회의에서 ①투자 유치, ②법·제도 구축, ③수송, 관광 등의 물류체계, ④철도, 도

로, 통신, 전력, 항만 등 인프라 건설 등 TRADP지역 개발을 위한 여러 이슈들의 논의와 TRADP사업 프로그램과 연계된 북한의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경험은 북한경제의 국제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KEDO사업을 통해 특권 면제 및 영사보호(KEDO의 법적 지위, KEDO 계약자 인원에 대한 신변보장 등), 통행(KEDO인원의 부지접근 : 자유로운 입출국절차, 효율적 통행로 개설), 통신(KEDO인원의 사업부지 내외로의 효율적인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부지(부지인수 및 부지접근·사용에 관련된 세부 사항), 서비스이용(북한 노무·물자·시설과 기타 서비스 공급 조건) 등의 의정서 협상 경험이 부가되면서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면서 북한의 현실에 적합한 개혁·개방 모델에 대한 연구가 깊어졌다. 즉, 북한의 TRADP사업에 대한 참여, 그리고 KEDO사업의 추진 경험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개혁·개방의 중요한 자산이었다. 다시 말해 2002년부터 본격화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개성 및 금강산 특구법, 나아가서 신의주특별행정구법은 이러한 자산의 토양위에서 배태되었다.

2. 주요 한계점

그러나 한계점도 분명히 노정되었다. ①

의사결정의 지연, ②이해조정의 복잡성과 관망적 태도, ③경쟁적 태도 등은 다자간 협력이 가지고 있는 기본속성에서 파생된 측면도 있지만, 냉전의 고도라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가. 참여국의 확대문제

TRADP사업이 KEDO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추진속도가 느렸던 것은 바로 재원조달 문제였다. TRADP 초기의 공동개발 구상이 후퇴한 것도 300억 달러로 추정된 재원조달문제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중국 길림성의 낮은 국내위상,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북한, 그리고 구소련해체 이후 자본조달능력이 취약한 극동러시아 등 이 지역의 자체 자본동원 능력을 감안할 때 TRADP사업에 대한 일본의 참여는 필요했다. 따라서 TRADP 회원국들은 제2차 정부간 회의에서 일본의 Commission회원국 가입권유 결의안을 채택하고 UNDP를 통해 계속 일본의 TRADP 참여를 종용하며, 제5차 정부간 회의에서는 TRADP 대상지역을 동북아 전체지역으로 확대해 일본을 포함시키는 등

일본 참여를 위한 사전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TRADP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옵서버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⁴⁷⁾ KEDO사업도 사정은 다르지만 유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재원부담과 EU의 집행이사국 참여로 재원조달의 애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한반도의 주요관련국중의 하나인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 신의주특구 지원문제

1997년 중반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총비서 취임(1997.9) 이후 북한의 정부간 회의 불참으로 TRADP사업이 한때 활력을 상실한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TRADP사업이 '구조 조정기'를 지나 '재도약 모색기'로 들어갈 때 TRADP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실기한 면이 있었다. 당시 북한은 크게 ①'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필두로 한 내부개혁 시동, ②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금강산·개성 특구법 제정을 통한 남북경제관계의 정상화, ③푸틴 대통령

47)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①TRADP와 같은 다자간 협력체제가 갖는 당사국간의 이해조정의 곤란과 불투명한 전망, ②접경 3국과의 미묘한 정치·외교·군사적 문제와 과거 역사의 미청산, ③정회원국으로 참여할 경우에 요구될 분담금 부담, ④참여 필요시 관련국들과의 쌍무적 접근방법으로 얼마든지 진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일동,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추진현황과 참여전략』, 한국개발연구원, 1997.12, 129쪽).

과 TKR - TSR연결 합의를 바탕으로 한 라진·선봉특구의 리모델링, ④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돌파구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경제개발자금 확보, ⑤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에 대한 EU의 협조 등 다섯 방향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선보이며, 그 중핵의 자리에 신의주특별행정구 구상을 내어놓았다. 그렇지만 초대행정장관 양빈(楊斌)의 중국 당국에 의한 구속과 연이어 터진 우라늄 농축 핵개발 파동속에 북한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구상은 내각회의를 통한 특구 건설의 잠정중단으로⁴⁸⁾ 일단 막을 내리게 된다. TRADP 회원국의 하나인 중국의 반대가 신의주특별행정구 건설의 파행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이 된 것이었다. TRADP의 확대발전을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⁴⁹⁾

다. 제네바합의체제의 유지문제

신의주특별행정구 건설의 보류는 분명 북한에게는 타격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쉽 약화⁵⁰⁾와 함께 라진·선봉의 실패 이후 새롭게 가닥을 잡은 북한의 대 중국 동북3성 전략이 시작부터 수정을 필요로 했다. 신의주 개방, 즉 중국 요령성과의 연계를 통한 북한경제의 국제화전략 구상은 북한경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여기에 제네바합의 위반을 이유로 한 KEDO측의 중유제공 중단과 경수로 건설 일시중단은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선군정치의 강화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회고해 보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시행 이후 KEDO 집행이사국간에 재원분담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미관계도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따라서 KEDO사업은 TRADP 사업과 달리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되자 KEDO 사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KEDO

48) 남문희, “북한, 신의주 특구 개발 올스톱”, 시사저널, 2004.8.31.

49) 필자는 2003년 1월 한 국제세미나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강조하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의 경제발전전략을 감안할 때 북한 핵문제해법의 일환으로 신의주를 포함한 북한의 4대 경제특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W협력론에 따라 TRADP의 확대발전을 통해 신의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배종렬, “새로운 동북아경제협력틀의 모색 : 김정일의 경제발전전략 및 핵문제해법과 관련하여”,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판 마샬플랜』, 한겨레신문·동북아평화센터 공동주최 제정규의원 4주기 추모기념 국제심포지엄, 한국수출입은행 대강당, 2003.2.14, II-1-1~17쪽 참조).

50) 서해공단의 후보지로 “해주를 달라”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요청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의주로 하라”는 의사표명이 있었지만, 당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동안 북한의 개방지역 후보지로 신의주가 빠짐없이 거론되었지만,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라진·선봉을 개방하면서 보여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태도가 걸림돌이었다. 설마 신의주를 개방하겠느냐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사업 그 자체가 북·미관계의 순향을 전제로 탄생했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북·미관계의 경색은 일본의 TRADP사업 참여,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에너지연계망의 구축, TKR-TSR 연결 등 동북아경제협력의 여러 구상들을 부차적인 이슈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3. 정책과제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여러 건설적인 제안들, 그리고 이미 시행된 TRADP사업 그 모두는 KEDO사업이 연결고리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KEDO사업의 근간인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악의 축’으로 거명(2002.1)된 이후 점차 흔들리다가 북한의 NPT탈퇴유보 철회(2003.1)로 심각한 도전을 맞이하였다. 6자회담을 통한 새로운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기는 하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미국은 북한을 ‘폭정의 잔

존기지’로 규정(2005.1)하고, 북한은 ‘핵무기 보유선언과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이라는 선택(2005.2)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다자간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정말로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고민의 해결은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나는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제네바합의체제에 대한 재검토이다.

가. 핵문제 해결의 방향

북한이 공식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발표하는 사례는 드무나 핵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례적으로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⁵¹⁾ 이에 의하면 핵문제가 악화된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으며,⁵²⁾ 제네바합의의 파기는 미국이 먼저 했기 때문에⁵³⁾ 북·미간에 신뢰축적이라는 차원에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동시행동원칙에서 일괄타결 방식⁵⁴⁾으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골자는 북·미관계의 정상화

51) 대미협상 실무책임자이며, 6자회담의 부단장인 북한 외무성의 리근 부국장은 2003년 12월 16일 미국 국제정책센터에 북한의 공식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전달하였다(리근,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들”, 2003.12.16).

52) 핵문제 발생원인은 부시행정부의 쌍무정치대화 중지, 악의 축 발언, 핵 선제공격대상으로의 규정 등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핵문제는 ①불가침 담보를 북한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② 북·미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③북한의 남한, 일본 등과의 경제거래를 미국이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 해결될 수 있다(리근, 위의 글, 1~2쪽 참조).

53) ①경수로발전소 제공시한인 2003년을 넘겼고, ②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이후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후퇴하고 있으며, ③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④조기사찰 주장 등이 바로 기본합의문을 어긴 사례들이다(리근, 위의 글, 2~3쪽 참조).

54)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①불가침을 담보하며, ②북·미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③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북한은 ①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②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며, ③미사일 시험발사를 보류하고 수출을 중지한다”는 것이며, 동시행동순서는

라는 수순 속에 경제적 보상과 함께 북한경제의 국제화를 지원해 달라는 입장으로 정리된다.

미국의 여러 정책담당자와 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리비아식 핵 해법모델을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6자회담 등을 통해 제2의 제네바합의체제를 만들거나 대북 추가적 조치를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폐기토록 하는 것인데, 후자의 방안은 북한 선군정치의 특성이나 한반도 관련국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⁵⁵⁾ 여기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중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플루토늄 핵개발문제는 미사일이나 우라늄농축 핵개발 문제와는 달리 제네바합의체제에 의해 잘 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네바합의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KEDO사업을 통한 에너지 확보,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목적의 식량획득, 북·미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⁵⁶⁾ 1990년 초반 이후 고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멈추고 경제의 플러스성장 기조가 정착되었으나 김일성사망 이전의 경제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⁵⁷⁾ 다시 말해 제네바합의체제가 북한 경제난의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경제의 재건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7년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 이후 본격적인 북한경제의 재건이 시작되면서 그와 궤를 같이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도 등장하였음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군정치가 대외적으로는 체제유지의 유력한 수단으로, 대내적으로는 군의 경제적 자원을 일반경

“①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은 핵계획 포기의사를 선포하며, ②미국이 불가침을 서면담보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③북·미, 북·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문제를 타결하며, ④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것이다(리근, 앞의 글, 3~4쪽 참조).

55) 추가적 조치에는 대량과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현금유입제한, 교역제한, 원조제한의 4가지 영역으로 대별되는데 경제체제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미·일 3국 중심의 조치들은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태효, “대북추가적 조치의 핵억지 효용성 검토”, 외교안보연구원, 2003. 8.4).

56) 연간 50만 톤 규모의 중유 확보와 국제사회로부터 연 100만 톤 정도의 긴급식량 확보는 대량의 아사자가 나왔던 1995~1997년 중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57) 김정일 북한경제 10년의 성적표를 평가할 때 9년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이 멈추고 1999년 이후 플러스 성장기조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나 명목 GNI, 1인당 GNI뿐만 아니라 예산규모, 석탄생산, 발전량, 비료 및 강철 생산, 대외부채, 무역량 등 여러 지표에서 아직 김일성 사망 이전의 북한경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배종렬, “김정일의 북한경제 10년 :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2004 북한경제 심포지엄(2004.7.7)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2004, 20~23쪽).

제로 투입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정책제언

필자는 2003년 초반이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발전전략을 감안, 동북아판 마샬플랜이라는 각도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법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신의주특구 건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⁵⁸⁾ 필자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무산이 북한의 핵문제를 악화시킨 원인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50년만의 가격조정을 시작으로 내부개혁조치를 단행, 경제의 화폐화(Monetization)와 시장화를 진전시키면서 라진·선봉에 이어 금강산, 개성, 신의주 등 특구의 확대를 통해 김정일식 개혁·개방을 가속화했다. 개성과 신의주는 북한 환황해경제권의 두 축으로 남으로는 서울-인천-부산과 북으로는 단동-대련-심양과 연결되면서 남한 및 중국 경제와 접목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신의주 특별행정구 구상은 그러한 전략의 완결판이었다.

북·미 국교정상화라는 수순 속에서 북한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에너지문제 해결을 지향했던 KEDO사업, 동북아국가간 지역협

력을 통해 외자유치를 기도했던 TRADP사업, 북한경제의 거시경제적 안정에 절대 필요한 외화 확보가 가능한 TKR-TSR 연결구상, 북한경제의 인프라 건설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동북아개발은행 구상 등 북한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없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제네바합의체제보다 우월하게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 1994년 제네바합의 체제와는 다르게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2002년 7월을 기점으로 북한경제의 국제화전략이 비로소 바른 방향을 잡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핵문제 해법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핵문제 해법은 북한경제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북한경제 재건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될 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자간 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조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는 KEDO사업은 유지하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참여하거나 동

58) 배종렬, 앞의 글, 2003.2 및 배종렬, “한반도평화와 동북아시아경제발전”, 배종렬·유승호 편, 『동북아와 남북한 경제협력』, 한국수출입은행, 2004.8 참조).

북아 에너지연계망 구축 등 새로운 프로젝트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뢰 축적이라는 차원에서 중유 50만톤의 제공과 경수로 2기 건설이라는 제네바합의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는 TRADP의 확대·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TRADP의 대상지역이 동북아 전체지역으로 확대되었지만 아직 TRADP 회원국들의 개발관심은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러시아의 나호트카를 연결하는 대삼각에 머물고 있다. 라진·선봉특구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일본과 서방자본, 요령성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북한의 새로운 동북3성 전략, 개성공단 건설이 가시화되고 남북한 간 경의선 연결이 합의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협조만 있다면 신의주 개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RADP에 대한 일본의 참여와 함께 6자회담에서 TRADP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TRADP에서 논의되었던 두만강지역개발회사(TRADCO)나 두만동북아투자공사(NEATIC)와 같은 가칭 '신의주동북아개발공사'를 설립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다자간협력과 쌍무협력의 병행이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 추가적인 경제제재 완화조치 단행, 일본의 북·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 러시아의 라진·선봉 등 동해경제권에 대한 지원 등은 쌍무협력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그

러나 신의주를 북한판 홍콩으로의 개발은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는 물론 많은 관련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며, TKR-TSR 연결은 사업추진의 당사자로 최소한 남·북·러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6자회담은 다자간 협력과 쌍무적 협력을 통해 북한경제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유용한 틀이 되어야 한다.

IV. 맺음말

10년을 주기로 북한의 핵문제가 다시 한반도의 이슈로 부상하였다. 그렇지만 그 강도는 더욱 강해져 NPT탈퇴에서 핵보유 선언으로 치닫고 있어 위기관리 프로그램의 강구를 요망하고 있다. 1994년 10월 북한의 핵문제 타결로 성장세를 맞았던 북한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은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개발문제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폐기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사업과 구상, 즉 KEDO사업, TRADP사업, 동북아 지역 개발금융기구, 동북아에너지 연계망, TSR-TKR연결 등은 모두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담보하였던 KEDO사업을 연결고리로 기능하고 있다. KEDO사업의 순항이 이들 사업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선언과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 선언을 접하면서 6자회담의 정상화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모색은 신의주에 북한관 홍콩을 건설 하겠다는 북한의 선택에 대해 영국 BBC 방송이 “50여년간 굳게 문닫아온 북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신의주는 세상으로 향하는 북한의 창이 될 것”이라는 논평에서

시사하였듯이 북한경제의 재건과 북한경제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한반도 관련당사국들이 모두 모인 6자회담은 1994년 제네바합의시보다 우월한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은 6자회담의 순항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일동,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추진현황과 참여전략』, 한국개발연구원, 1997.
- 김영호,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관 신마셜플랜의 구상”, 『동북아개발은행의 의미와 역할』, 동북아평화센터 주관 아시아태평양연구회·21세기동북아연구회 공동주최 조찬토론회, 2000.10.13.
- 김태호, “대북추가적 조치의 핵억지 효용성 검토”, 외교안보연구원, 2003.8.4.
- 남덕우, “왜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한가?”,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관 마셜플랜』, 한겨레신문·동북아평화센터 공동주최 제정구의원 4주기 추모기념 국제심포지엄, 한국수출입은행 대강당, 2003.2.14, 0-2-1~22쪽.
- 남문희, “북한 핵해법 : 코러스 프로젝트 떴다”, 시사저널, 2003.2.6/13.
- 남문희, “북한, 신의주 특구 개발 올스톱”, 시사저널, 2004.8.31.
- 리 근,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들”, 2003.12.16.
- 배종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북한의 경제정책”, 배종렬·박유환 편, 『남북한 경제협력 :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0.4, 3~23쪽.
- _____,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완화가 남북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 배종렬·박유환 편, 위의 책, 43~55쪽.
- _____, “새로운 동북아경제협력력의 모색 : 김정일의 경제발전전략 및 핵문제해법과 관련하여”,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관 마셜플랜』, 2003.2.14, II-1-1~17쪽.
- _____,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안충영·이창재 엮음, 『동북아경제협력 : 통합의 첫 걸음』, 박영사, 2003, 253~282쪽.
- _____,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경제발전”, 배종렬·유승호 편, 『동북아와 남북한 경제협력』, 한국수출입은행, 2004.8, 253~282쪽.
- _____, “김정일의 북한경제 10년 :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2004 북한경제 심포지엄(2004.7.7)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2004, 5~32쪽.
- 이강철, “동북아개발은행(NEADB)창설을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 : 동경제단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관 마셜플랜』, 2003.2.14, I-3-1~19쪽.
- 이상근, “부문별 경제협력 : 에너지”, 안충영·이창재 엮음, 앞의 책, 78~105쪽.
- 윤갑구, “통합독일의 서구전력계통으로의 연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전력계통연계의 비교검토”, 한국기술사회 한·일합동 심포지엄(1997.10.27) 및 대한전기학회 추계학술대회(1997.11.29).

- 한호석, “북 외무성의 2월 10일 성명과 조미관계의 새로운 국면”, 2005.2.14.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경수로사업 추진현황』, 2004.11.30.
- 통일부, “대북경수로 사업비 재원분담결의안 채택” 보도자료, 1998.11.10.
- KOTRA 북한팀, “북 철도성 부상, TKR-TSR 연결사업 촉구”, (http://www.kotra.or.kr/main/trade/nk/nk_news, 2004.3.9).
- 셀리그 해리슨, “제네바합의 재협상해야”, 한겨레신문, 2002.11.18.
- 올가 말리체바 지음/박정민·임을출 옮김, 『김정일과 왈츠를 : 러시아 여기자 김정은의 극동방문 동행취재기』, 한울, 2004.
- Bradley O. Babson, “Searching for the Right Side of History in Northeast Asia : Potential Role of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RINA REPORT*, Vol. June 2002.
- Miller M., A. Holm, and T. Keller,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ort*, UNDP, Consultation with Participant Governments, Pyongyang, October, 1991(통일부 교류협력국, 『두만강지역 개발관련 UNDP 기술조사단 타당성조사 보고서』, 1991.12).
- Nautilus.org/napsnet/special report/Sokolski Letter to KEDO. txt(December 22, 2000), KEDO Response to Sokolski. txt(January 16, 2001), Sokolski Response to KEDO Letter. txt(January 29, 2001).
- Tumen Secretariat,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Foreign Direct Investment”, www.tumenprogramme.org/tumen/sectors/Investment/fdi.
- 평양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2004.8.
- 東アジア貿易研究會, “北朝鮮 經濟改革の中核 新義州特區の開発斷念(東京新聞 11月 7日)”, 『東アジア經濟情報』 No. 137, 2004年 11月号.